



5·18 유족회와 부상자회가 철거 반대 농성을 벌이고 있는 옛 전남 도청 별관(검은 천으로 가려진 부분) 일대 전경. 뒤편 공사장에서는 문화전당 부지조성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나 별관 철거작업이 지연되면서 핵심공정에는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도청 별관 해법찾기 광주시가 나섰다

국립아시아 문화전당 내 옛 전남도청 별관 철거 반대 논란이 1년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박광대 광주시장과 지역 국회의원, 최협 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장 등이 해법 모색을 위한 자리를 마련키로 해 주목된다.

박광대 광주시장은 1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정례회를 갖고 “도청 별관 문제를 이제는 매듭지어 문화전당이 차질없이 건립되도록 해야 한다”며 “지나해(전당 건립 예산)500억원, 올해 500원을 포함해 지금 묶여있는 1천억원을 풀어서 시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의 이 같은 발언은 지역 최대 현안인 도청 별관 문제의 해결을 위해 본격 행보에 나서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박 시장은 오는 3일 지역 국회의원과 최협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장 등과 회동을 갖고 도청 별관 문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 뒤 대응책을 마련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별관 문제와 관련, 박광대 시장, 지역 국회의원, 최협 위원장이 회동한 것은 지난 1월 이래 두번째다.

이번 회동과 관련, 시청 안팎에서는 “1년여 동안 갈등이 지속돼 온 만큼 관련 단체들이 이해할 수 있는 차원의 입장 정리

박시장, 지역국회의원·최협위원장 회동 “묶여있는 1천억원 하루빨리 풀려야”

이뤄지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지역 사회에서는 별관 문제 해결을 위해 광주시가 소극적으로 대응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만큼 이번 광주시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와 관련, ‘문화전당건립문제 합의적 해결을 바라는 시민모임’은 2일 오전 학동 중심사 입구에서 별관 문제와 관련해 5월 단체와 문화중심도시추진단에 시민들이 공감할 만한 합의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서명운동을 벌일 예정이다.

이 단체는 미리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양측의 원만한 합의안 도출이 어려울 경우 신뢰할 만한 기관과 단체 주도하에 광범위한 민의수렴을 해야 한다”며 “주민투표, 여론조사 등 민심을 수렴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화해 일부 단체가 아닌 지역 공동체의 합리적 판단으로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해 6월24일 5·18 구속 부상자회의 도청 별관 철거 반대농성으로 촉발된 별관 논란은 1년째를 맞고 있지만, 해법찾기는 원점을 뺄고 있다.

추진단은 도청 별관을 철거를 고수하고 있으나, 5·18 부상자회와 유족회는 별관 철거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는 등 양측의 입장이 평행성을 달리고 있다.

이들은 그동안 만남에서 서로의 시각차를 존중하고 대화로서 문제를 해결기로 했지만, 별관의 처리라는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접근은 이뤄내지 못하고 있다.

지난 2월에는 민주당 박주선 의원이 양측의 중재에 나서 막판 대타협에 대한 기대를 부풀리기도 했다.

그러나 ‘도청 보전을 위한 공동대책위’를 구성, 농성을 벌인 5월 단체 가운데 구속부상자회만 같은 달 17일 농성을 풀었을 뿐이다. 곧바로 유족회와 부상자회가 농성을 재

개해 현재까지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2012년 완공예정인 문화전당 건립공정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논란 1년 동안의 성과라면 지난해 12월 중단된 문화전당 공사가 지난 3월 일부 재개됐다는 것 뿐이다.

문제는 문화전당 건립 공사의 핵심공정에 포함된 별관 철거가 지연되면서 오는 2012년 완공예정인 문화전당 건립 공정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별관 해체 논란이 장기화함에 따라 5월 단체는 물론 지역사회 내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최근 5·18 구속부상자회가 결자해지 차원에서 유족회와 부상자회의 농성을 해제하겠다고 나서 양측이 물리적 충돌 직전까지 가는 등 5월 단체간 갈등의 골이 깊어진 상황이다.

또 추진단이 법원으로부터 공사방해금지 및 방해물 제거 처분결정을 받아내 집행을 앞두고 있는 데다 5월 단체 간부들에 대한 재산 가압류 조치를 단행, 양측의 감정이 극도로 악화돼 문제해결을 위한 대화마저 실종된 상태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광주 7,500명 전남 1만188명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 개시

11월까지 6개월간 사업비 512억 투입

청년 실업자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희망근로 프로젝트’가 광주 7천 500명, 전남 1만188명 등 전국에서 25만명이 참여한 가운데 1일 본격 시작됐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이날 “광주 604개, 전남 1천316개 사업장에 모두 1만7천688명의 근로자를 투입해 희망근로 사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사업 추진기간은 11월30일까지 6개월이며, 국비 460억원, 시비 36억원, 구비 16억원 등 총사업비 512억원이 투입돼 604개 단위 사업에 7천500명이 배치된다.

주요 사업은 ▲동네마당 조성과 공장 밀집 진입로 환경정비 ▲자전거 인프라 개선 ▲공중화장실개선·DB구축, 광고물 일제정비 ▲덕흥주민센터 조성, 재활용품 수집 시범도시 거점수거방식 도

입 등이다.

전남도는 선도 사업 7개와 시·군 권장사업 25개를 중점 추진한다. 핵심 사업은 ▲녹색성장마을 만들기 ▲광고물 일제정비 ▲선도사업과 숲가꾸기 ▲등산로 정비 사업 등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행정부시장 등 간부 공무원을 포함한 점검반을 편성해 사업현장을 점검하고 이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적극 시정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희망근로’ 프로젝트는 근로능력이 있는 사회적 취약계층에 근로와 연계해 한시적으로 생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자는 차상위계층과 실직자, 휴폐업 자영업자 등이다.

임금은 1일 3만3천원, 월 83만원 정도이며, 주 5일 근무에 주1회 유급휴가와 월차 수당도 지급되고 임금 일부를 전통 재래시장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윤영기·최권일기자 penfoot@

지자체장 오늘부터 금품제공 금지

선관위 지방선거 관련 지자체 행사·활동 기준 발표

광역·기초단체장은 2일부터 내년 선거일(6월2일)까지 법령에 근거없이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해서는 안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일 제5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와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행사 및 활동 등 운용기준’을 발표했다.<표>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86조 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출마지역이 자신의 지자체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칠 경우 2일부터 내년 선거일까지 지자체 소속 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금품 및 기타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를 약속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특히 법령이 정한 범위를 벗어나 지자체장이 자신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자신이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전면 금지된다.

이는 지자체장이 직무상 행위와 관련해 선거구민들에게 선심성 금품 등을 제공,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다만, 해당 지자체가 정기적으로 수행해 왔거나 지방선거일 1년 전에 대상·방법·범

지자체장 행위 가능·금지 사례

가능	금지
경로당 물품 지원 학교인선조사 예방 보조금 지원 신생아 전입세대 지원 지자체장의 공공이익 위한 행사 시상 국군장병 등에게 위문품 제공 불우이웃돕기 성금 제공	청사 방문자 기념품 제공 지방세 납세자 경품 제공 달력 제작·배부 노인대학 졸업식 시상 외국인주부 친정나들이 항공료 등 지원

위 등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정해놓은 금품 제공 행위나 의례적·구조적·자선적 행위 등은 가능하다.

선관위는 “공명정대하고 깨끗한 지방선거가 될 수 있도록 지자체에 행사 및 활동 운용기준을 작성해 배포하고 사전안내를 강화해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며 “지자체장·임후보 예정자의 위법행위에 대한 유권자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모두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4대강 살리기 사업비로 18조원이 넘게 투입될 전망이다.

애초 계획보다 중요 건설량이 늘어나는데다 수질개선비용도 포함되는 데 따른 것이다.

1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처음 계획보다 4조원 이상 증가한 18조원 이상을 4대강 살리기 사업에 투입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이를 지난달 26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재정전략회의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작년 12월 4대강 살리기 프로

4대강 살리기 18조원 투입

수질개선 비용 포함 계획보다 4조원 늘어

젝트를 처음 발표할 때 사업비를 14조원 정도로 추정했으며 지난 4월 마스터플랜(안) 발표 때에는 사업비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었다.

작년 12월 발표때보다 사업비가 4조원

가량 늘어나는 것은 사업 규모가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에서는 보를 4개, 준설도를 2억2천만대로 각각 잡았으나 마스터플랜(안)에서는 각각 16개, 5억4천만

으로 늘어났다.

또 생태하천조성과 자연거리는 프로젝트에서는 구체적으로 언급이 없었으며 마스터플랜(안)에서 각각 760km, 1천411km로 계획했다가 이후 870km, 1천713km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아울러 마스터플랜(안) 발표이후 12개 시·도 순회설명회를 하면서 접수된 지방자치단체의 숙원 사업을 반영한 것도 사업비를 늘려나간 한 요인으로 알려졌다. 또 수질개선비용으로 5천억원 가량이 투입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연합뉴스

평화를 사랑하는 세계인으로

아들아, 네 가슴에 저 넓고 뜨거운 세계를 품어라!

이 책을 인생의 나침반으로 삼아 네 꿈을 펼쳐라!

문선명

평화를 사랑하는 세계인으로

이 책을 인생의 나침반으로 삼아 네 꿈을 펼쳐라!